

## 해양안보위협의 확산에 따른 한국해군의 역할 확대방안

길 병 옥 \*

### 〈 목 차 〉

- I. 서 론
- II.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위협 분석
- III. 미래 해양전쟁양상 대비 해군력 건설 방향
- IV. 미래전 대비 전략해군의 역할 확대방안
- V. 결론 및 향후과제

## I. 서 론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강한 해군력을 건설한 모범사례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한국해군은 창설 초창기 함정 1척 없던 불모지 상태에서 미국의 유·무상 지원에 의한 연안방어에 치중했지만, 한국형 호위함 건조 등 자주적 해군력 건설을 통한 지역해군으로 그리고 수상·수중·항공·상륙작전 등 입

\* 충남대학교 교수

\*\* 본 논문은 제15회 함상토론회(2012. 6. 15)에서 발표한 것임.

체적 전력을 확보한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여 왔다. 현재는 세계 10위권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해양강국 건설을 보장하는 정예선진해군”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정진하고 있다.

한국해군의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하며 국가주권과 해양권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있다.<sup>1)</sup> 그동안 한반도 주변해역 및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재난·재해지원, 인도적 지원 및 해외구호활동, 테러억제 및 해적퇴치 등 포괄해양안보(Comprehensive Maritime Security) 시대의 그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해군은 전장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차원적인 동시작전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략해군”(Strategic Navy)이 되어야 하며 동북아 지역안보는 물론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리전략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그리고 “통합, 혁신 및 투자”(Integration, Innovation and Investment)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70%이상, 대외무역의 90%이상을 바다에 의존하고 있다.<sup>2)</sup> 특히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 외교, 문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의존적 관계(Interdependence)는 심화되고 있어 바다는 대외수출입의 생명선이며 국가경제에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보고(寶庫)이다. 지정학적인(Geo-political) 의미와 더불어 지경학적(Geo-economic) 여건을 감안한 해양이익의 극대화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해양을 통제하고 국가 생명선인 해상교통로(Sea-lane Communications)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익이다. 국익 차원 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도 해양안보가 국가안보의 생존과 존망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강조하자면, 국가발전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필승해군의 정신은 손원일 제독의 해안적 시각에서 나온 교훈이다.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천혜자원의 보고인 바다는 장보고 대사, 불멸의 충무공 이순신 제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위국헌신의

1) 해군본부, 「해군비전 2030」(계룡: 해군본부, 2008), pp. 17-20.

2)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The Power of Balance: America in Asia*, New York: CNAS, 2008.

반만년 역사와 함께 이어온 창조적 도전정신과 진취적 기상이라는 역사문화와 위국정신의 산실이다.

역사에서 얻은 교훈으로부터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해양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해양안보 확립의 측면에서 현재 해군에게 주어진 사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잠재적·불특정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안보질서의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하여 어떤 해군이 되어야 하는가와 어떻게 목적하는 바를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sup>3)</sup> 즉, 전장환경 및 외부위협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력을 운용하여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탈냉전이후 전개되고 있는 안보위협의 다양화, 지역분쟁과 갈등의 심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기, 해양영토분쟁의 가능성 증가, 초국가집단의 테러위협, 지역국가들의 군사력 증진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더불어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완벽한 대북 억제능력을 가질 수 있는 전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아직 잠재적 위협과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독자적인 전쟁기획과 수행능력을 완비한 상태는 아니고 해상교통로 및 해상자원의 확보는 물론 동북아 주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과제는 방위충분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전작권 환수문제, 전력체계 및 군구조 개편, 첨단무기 획득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이후 해군전력의 확장방향 등에 이르기까지 해군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능력, 작전수행 방안, 대외전략 등 다차원적이다.<sup>4)</sup>

해양안보의 핵심기초는 한미동맹의 강화에도 있다. 그동안 한국해군은 미국과의 전략적 상호협력과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대하여 왔고 외부위협과 외세의 침략의지를 사전에 억지하는 동맹효과를 극대화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유지와 세계평화를 위한 한미 간의 전략동맹은 지난 60여년 동안 그 발전적인 제도적 틀을 굳건히 유지하여 왔다. 최근에는 동북아 주변국들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군사외교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3) 길병욱,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와 해군력 운영개념 발전방향,” 해양전략 심포지엄 논문집(2009), pp. 4-17.

4) 신성호, “미래 해양안보위협과 한국해군 발전방향,” 제13회 함상토론회 논문집(2009), pp. 5-29.

하지만 가변적인 안보환경 및 국방여건 속에서 안보위협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르는 대응능력의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방위능력과 전력체계 그리고 인적구성에 이르기까지 한국해군에게 주어지고 있는 도전과 위협은 실로 지대하다. 해양안보환경이 불특정적이고 불확실한 위협요인들로 인해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해군은 향후 어떤 해군이 될 것인가와 어떻게 해군력을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립, 부대구조, 전력구조, 군수지원, 정보화, 인적자원 확보, 해군문화 정착 등을 제시한 해군비전을 구현하여 국가보위와 해양강국 건설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해양거부, 통제 및 전력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될 한국해군은 대내외적인 위협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전력체계를 구비하고 국가안보를 확립하며 국익증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해군으로서의 패러다임과 미래 비전 제시, 미래전 양상에 부합되는 첨단전력체계 구축, 부대구조 및 조직의 체계화가 해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이다. 전략해군 건설과 미래 해군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군 스스로의 자율성, 창의성 및 신축성(Self-regulation, Creativity and Flexibility)과 더불어 비교의 관점에서 균형되고 객관적인 상생변영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sup>5)</sup>

본 논문은 미래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세계 제5위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보장하는 한국해군으로서 그 위상정립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위협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해양전쟁양상의 변화와 그 전망에 따라 해군력 건설의 방향을 고찰한다. 특히 전략해군의 역할 확대방안은 해군의 규모와 구조, 전력체계, 예산 및 인적자원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군에 산적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선진정예해군의 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5) Amitai Etzioni, *Modern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64.

## II.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위협 분석

중층적 안보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세는 미국주도의 군사적 단극, 주변강국들의 대립과 갈등이 예기되는 정치·외교적 다극,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협력적 다극체제를 이루고 있다.<sup>6)</sup> 즉, 경제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증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대결과 갈등의 구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협력과 경쟁의 이중적 양면성”을 띠고 있다. 미국의 패권질서 재구축과 중국의 중화이념 부상이라는 경쟁관계가 중심축이 되고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향수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러시아 등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갈등구조 및 안보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강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탈냉전 및 9.11테러를 계기로 변화된 미국 주도하의 신국제질서 속에서도 전통적인 갈등·대립 구도와 협력 구도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안보구도 속에서 역내 강대국들은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상생변영이 강화되는 반면 한반도 문제와 도서 영유권 분쟁 등 전통적인 위협에 있어서는 대립이 병행하는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양분쟁과 관련해서는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과 일본간의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러시아와 일본과의 북방도서문제 등 주변국 모두가 크든 작든 영토분쟁에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분쟁은 서로 압 목적으로 연기 또는 잠복시켜 놓았을 뿐 언제라도 첨예한 이슈로 부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7)</sup> 이것은 단순히 문제가 되는 도서나 해양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양태로서의 분쟁가능성보다는 서로간 해양자원 및 자국영토에 대한 영유권경쟁으로서의 억지력 확보를 강조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거쳐 통일로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이 점차 사라져 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요인으로는 강대국들 간의 국익경쟁 및 영토분쟁, 대량살상무기

6) Byung-ok Kil, *Security Policy Dynamics*, London: Ashgate, 2001, Ch. 1.

7) 아태지역의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협력과제에 대해서는 박호섭, “해양전략의 현대적 개념과 과제,” 해군대학 해양전략 심포지엄 논문집(2004), pp. 1-52 및 백진현,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 협력의 과제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8집 3호(1999), pp. 55-81 참조.

의 확산, 초국가적 테러위협과 생화학 무기의 살포 등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는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한 해양분쟁, 주변국과의 비대칭전 그리고 저강도 분쟁형태로서 나타나는 뉴테러리즘의 확산 등이다.<sup>8)</sup> 요약하면, 주요 안보위협요인은 강대국 간의 국익경쟁 및 군비증강, 지역에서 비대칭 저강도전쟁 및 해양도서분쟁 가능성 증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초국가적 테러위협, 국제범죄 및 마약 밀거래, 대량난민의 유입, 자연환경파괴 등이다.

한국해군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북한의 핵개발과 첨단미사일개발 그리고 해상침투 및 국지도발이다.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평화적 도발 행위이다.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른 북한의 도발은 유엔 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인 공격행위이며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격을 가한 비인도적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세습정권과 체제유지를 위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통계적으로 북한의 대남침투건수는 1954년 이후 2010년까지 해상 920건과 육상 20건 등으로 모두 합쳐 1,640여건이다.<sup>9)</sup> 그리고 대남국지도발은 해상도발 510여건(경비정·어선·월선 490여건, 해상교전 20여건 등), 지상도발 470여건(총·포격 90여건, 습격·납치 70여건 등), 공중도발 40여건 등 모두 합쳐 1,020여건이다. 최근에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 서해상에서의 무력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원점을 철저히 응징하는 것이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분쇄하는 첩경이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세를 고려해 볼 때 주변국들의 군비증강과 과기강군(科技強軍)을 앞세운 중국의 국방비 증대가 우려되는 사안이다. 최근 스텔스기 개발과 항공모함의 취역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의 항공우주 및 해양능력 그리고 장거리 투사능력은 괄목할 만큼 증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원거리 투사능력의 강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력증강 내용을 보면 해상작전 지속능력, 대잠수함작전능력, 해상방공체제, 상륙전 능력, 전략전투기 및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방공체제 및 공중급유능력 확보, 지상공격능력 및 체계, 지상군의 기동력 및 병참지원, 지휘통솔능력 등이 포함된다.<sup>10)</sup>

8) 서현석, “해양전략과 무기체계 발전방향,” 해양전략연구소 편, 「동북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우리군의 발전방향」(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01), pp. 137-182.

9)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 250.

중국의 제해권과 제공권 능력 확대는 군사혁신을 통한 첨단 무기체계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 다련(大連)항에서 항공모함 쉬랑(Shi Lang, 구 소련명 Varyag)이 시험 항해를 한 바 있고 2014년까지 6만-8만톤급의 항모를 독자기술로 만들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sup>11)</sup> 또한 자체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殲-20, 작전반경 1500km)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는 것을 발표한바 있다.<sup>12)</sup>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와 동중국해 대륙붕 영유권 등을 놓고 외교마찰을 빚은 바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한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사력 증진과 국방비 증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유지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2010년 3월에 발표한 공식 국방예산은 780억 달러(약 92조원)이지만 중국의 국가회계방식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1천5백억 달러 이상을 쓰는 것으로 추산된다.<sup>13)</sup>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방예산으로만 추산하면 2000-2009년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이 9.6%인 것에 비해 국방예산은 평균 11.8%씩 증가했다.<sup>14)</sup> 이에 비해 일본의 국방비는 약 62조원이고 한국은 약 31조원 규모이며 미국은 2012년 국방예산을 6,710억불(약 740조원)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군사전략, 무기체계, 동맹관계 및 해외주둔정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역할에 새로운 전략적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은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와 역대 미군주둔 순환배치, 유사시 지상군 증원전력 변화 등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능력과 역

10) 국방기술품질원, “미국 국방부 연례 의회보고서: 2010 중국 군사력 및 안보동향,” 2010, pp. 28-30 및 “미, 중국의 군사력, 태평양까지 넘바,” 「한겨레」, 2010년 8월 17일.  
 11) 한국의 스텔스기 도입과 실전배치는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일본은 이미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자체 스텔스 전투기인 “신신”(心神.ATD-X)을 개발 중이다. 이상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동북아 국제정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학술세미나 논문집, 2011년 1월 27일, pp. 3-4 및 [Http://www.yonhapnes.co.kr](http://www.yonhapnes.co.kr)(검색일: 2011년 1월 12일) 참조.  
 12) [Http://www.yonhapnes.co.kr](http://www.yonhapnes.co.kr)(검색일: 2012년 5월 1일).  
 13)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 pp. 41-44.  
 14) 이상현(2011), 전계서 참조.  
 15) American Forces Press, “Obama Asks for \$671 Billion Defense Budget in Fiscal 2012,” Defense Professionals, February 16, 2011.

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6)</sup>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윈윈(Win-Win: 2개 전쟁 동시수행) 전략을 윈-플러스(One-plus: 1개 지역 대규모 전쟁 수행 및 1개 지역 도발 거부) 전략으로 전환되어 한미연합전력체계 증진에 대한 논의가 다차원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반도 해양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해군력 21: 결정적 합동군사력 투사(Sea Power 21: 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ies)”라는 새로운 해양전략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해양에서도 불량국가의 위협이나 테러리즘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세적인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sup>17)</sup>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Maritime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지역 및 세계안보 수요에 공동대처하고 해양에서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sup>18)</sup> 향후 한미동맹은 물론 해양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현재보다 훨씬 확대된 원거리 투사능력과 잠수함 세력화를 포함한 비대칭전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방법이다.

현재의 동북아 안보지형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다음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거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잠재성이다. 미국은 중국이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능력을 갖춘 유일한 강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둘째, 보다 좁게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국의 대국화를 우려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한 미래가 동북아 안보에 미칠 영향이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및 선군정치로 인한 한반도 내외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고조이다.<sup>19)</sup>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대립의 심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

16) 국방부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www.mnd.go.kr>; 검색일: 2012년 5월 1일).

17)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 안보구상”(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지역해양안보구상”(RMSI,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등이 포함된다. ADM Vern Clark, “Sea Power 21: Projecting Decisive Joint Capabilities,” Proceeding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2002.

18)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은 해양타격(Sea Strike), 해양방어(Sea Shield), 해양기지화(Sea Basing) 등을 망라하여 압도적인 제해권(Sea Control)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한미협력의 예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대특수전훈련, 프리덤 가디언, 림팩훈련, 퍼시픽 리치코브라 골드, PSI 등이 있다. <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2년 5월 25일).

19) 길병욱, “중국의 동북아 정책: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 『한국동북아논총』, 제10권 3호(2005), pp. 8-19.



는 탈냉전 이후 군비통제와 완화라는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군사력 증강과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해군력 증강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에 나서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잠재적 갈등 요소인 해양영토분쟁이며 탈냉전 이후 발생되고 있는 지역 불안정의 지속과 미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고조 때문이다. 향후 해양안보위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해군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Ⅲ. 미래 해양전쟁양상 대비 해군력 건설 방향

미래의 안보상황은 “불확실성”과 “불특정성”으로 대변할 수 있고 전쟁개념은 다차원적인 최첨단 하이테크 정보전쟁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주변국들은 소위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통해 국방전력의 최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장차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미래의 군사적 위협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군개혁 및 구조개편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sup>20)</sup> 현존하는 안보위협은 물론 미래전에 대비하는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제고, 그리고 국가방위의 효과와 효율성 극대화 등이 핵심 사항이다.

현재 우리 군은 대북 억제능력은 구비했으나 잠재적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등 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능력은 완비하지 못했다. 동북아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체계를 구비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군도 군사혁신을 통한 방위력 증강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국방개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방개혁 프로그램에는 표면적으로 군 전력 향상의 목표와 단계가 제시되었지만, 실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지나치게 북한위협에 치중한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제약되어 있는 문제점도 있다.<sup>21)</sup>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에 기초한

20) 백종천, “한국의 국방개혁: 주변 4강과의 비교시각에서,” 이대우 편,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 및 발전방향」(서울: 세종연구소, 2000), pp. 71-118.

현존위협과 더불어 미래상황의 가변적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판단과 평가를 토대로 전향적이며 실질적인 국방개혁의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에 제기된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정치 및 전략적인 측면, 작전 및 전술적인 측면, 그리고 무기체계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sup>22)</sup> 먼저 정치 및 전략적인 측면에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의 역할이 보편화되고 정치외교력, 경제력 및 정보력 등 전방위 수단의 활용이 증시되었다. 둘째, 작전 및 전술적인 측면에서 다국적군 작전이 시행됨에 따라 연합작전을 위한 임무수행절차, 지휘관계 및 장비의 상호운용성, 공중타격전력, 함정발사 원거리 순항미사일, 항모전력, 특수전 전력, 정보전력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합동작전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무기체계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물리적 타격위주의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정밀성 및 기동성을 겸비한 정보 네트워크 체계의 활용으로 질적능력 우위의 효과중심(Effects-based) 및 네트워크중심(Network-centric) 전략의 수행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미래전 양상의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국가안보의 미래가 군사과학기술능력, 정보능력, 해양력 및 항공우주력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장환경의 변화는 군사력의 질적우위에 의한 정보과학전과 비대칭전력의 역할 확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쟁양상의 변화는 전력체계의 발전추세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면으로 보면 전장관리 체계의 통합 및 자동화, 기존 무기체계 및 인식체계의 정밀지능화, 무인 자동화된 원격조종 시스템의 활용확대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23)</sup> 종합하면 전쟁승리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들은 다국적군 및 육·해·공군의 합동성/연합성(Jointness) 그리고 전쟁지휘통제체계의 효율성 증대, 전장인식체계의 활용, 첨단기술에 의한 정밀타격체계의 발전 등이고 이러한 능력들의 결합으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 복합체계가 미래전의 승리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21) 언론에 보도된 남북한 군사력 비교(육군은 북한육군의 80%, 해군은 북한해군의 90%, 공군은 북한공군의 103%)는 1990년대초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단순전력지수방식에 일부상황변수를 첨가한 평가수준에 그쳤다는 문제제기와 단순히 북한의 위협만 고려한 상태에서는 미래 종합전쟁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비평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범위를 뛰어넘는 정보전력 확보, 지휘통제자동화체계 및 정밀유도무기체계 구입 등을 통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2004년 8월 30일, 1면 및 류재갑, “미래전쟁의 양상변화와 해병대의 새로운 역할,” 「전략논단」, 통권 제6호(2007), pp. 14-33.

22) 한용섭 외, “이라크 전쟁의 평가를 통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정책연구과제 자료집(2003) 및 공군전투발전단, 「이라크 전쟁」(계룡: 공군본부, 2003), pp. 72-76.

23) 전과 등.

따라서 최근의 전쟁양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전장 인식체계(C4ISR)를 이용한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개념을 적용하여 통합성, 신속성 및 효율성을 실현함으로써 다국적군 연합전력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스템 복합체계에 의한 “벌떼 전술”(Swarm Tactics)의 최적활용은 제해권/제공권 확보능력과 특수전 전력의 조화로운 결합 및 군수지원의 대혁신에 의한 결과이었다. 결국 네트워크중심 및 효과중심작전은 병력의 규모보다 기동성과 무기체계의 첨단성이 중시되고 통합적인 초점군수체제(Focused Logistics)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sup>24)</sup>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볼 때 미래 해양전쟁 양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sup>25)</sup> 첫째, 미래해전은 고도의 전자정보전으로 적의 전쟁수행체계를 전략적으로 교란하고 마비시킨 후 함대지 유도미사일, 첨단 항모탑재 항공기와 항공우주력을 이용하여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중심 및 지상군 전투력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적의 전쟁 수행능력 및 의지를 말살시켜 전쟁을 승리로 종식하는 양상이 될 것이다.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래전은 21세기형 전자정보전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미래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 스텔스 무인기, 정밀 장거리 유도미사일 등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통해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C4ISR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둘째, 미래해전은 기동전 능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특히 기동력과 정찰력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원거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C4ISR체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첨단 무기체계에 의한 신속기동전의 전개와 미사일 및 장거리 공격무기를 이용하여 적의 중심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다. 기동전의 주요 목적은 제4세대 전쟁개념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력체계의 세력우위와 선제공격 등을 통해 적의 병력과 시설보다는 적의 중심과 전쟁의지를 파괴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장거리에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체계의 존재 유무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셋째, 미래해전은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24) 최기출, 「획득군수관리론」(서울: 21세기군사연구소, 2009).

25) 미래 해양전쟁 양상에 대한 논의는 장승학,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해군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pp. 48-51 및 길병욱, “국가안보와 한국군의 발전방향,” 「해양전략」, 제125호(2004), pp. 1-38 참조.

해 제한전 및 선택적 국지전 형태의 전쟁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래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초정밀유도무기, 항공우주무기체계, 장거리 유도 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력과 파괴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또한 장기간의 대치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선택목표에 대한 파괴력 집중의 단기전이 예상되기에 전역에서 꾸준한 감시체계의 운용이 필수적인 것이다.

넷째, 군수물자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래전은 땅과 바다, 하늘과 우주, 그리고 사이버 세계인 가상공간까지 포괄하는 5차원의 입체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통합적인 군수지원체제(Integrated Logistics Support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군수지원의 특징은 용병술 체계와의 결합, 군수 지휘제대와 지원제대의 역할 구분, 군수관리 정보체계의 연계성 강화, 군수 기능·병과·무기체계별 특성의 효율적 반영, 사용자 중심의 군수지원체제 확립 등이다.<sup>26)</sup> 다양한 전장에서 신속, 정확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의 연합작전 형태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즉응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민·관·군 국가자원의 통합적 활용과 동원 그리고 전·평시 국가자원의 전력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된다.

미래 해양전쟁 양상의 변화와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안위를 책임질 한국해군은 어떤 해군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여 해군의 역할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발전방향은 미래의 새로운 위협 및 해양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장차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대구조와 첨단 전력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국력증대에 따른 해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해군의 건설방향에 대한 사항은 해군의 역할과 기본교리 및 전략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해군의 역할은 크게 해양거부(Sea Denial), 해양통제(Maritime Control)와 해양전력투사(Maritime Power Projection)로 구분이 가능하다. 대륙중심의 국가는 해양거부 전략을 펴고 해양국가인 경우에는 해양통제와 전력투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해군의 경우, 「해군기본교리」에서 해군력과 구성에 대하여 “해군력은 국가목표의 지원, 국가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는 역량이다. 해군력은 군사력의 한 구성요소로서 해양력의 필수적인 전투요소로서

26) 김광열, “최신기법을 통한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방안,” 미래군수지원체제·군수 術 발전세미나 논문집(2010), pp. 51-65.

전투함, 잠수함 및 항공기를 포함한 무기체계,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기지 및 이들의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7)</sup> 또한 해군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익증진을 위하여 해양을 이용하는 총체적인 능력 또는 수단인 해양력의 군사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 한국해군의 역할은 해양통제와 해양투사능력의 제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해군이 수행해야 될 목표는 한반도 해역방어와 해상교통로 수호 그리고 유사시 대북 해양통제 장악과 북한의 WMD를 억제하는 것이고 수행과제로는 한반도 해역에서 4대 1의 확연한 무력우위 유지, 해상교통로 확보 및 해양군사훈련 강화, 충분한 대북억제력의 확보 등이다.<sup>28)</sup> 한국해군 기본교리에 나와 있는 해군의 역할을 보면, 평시에는 전쟁억제, 해양주권 및 권익보호, 국가 대외정책지지 및 국위선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시에는 해양통제권의 확보, 유지, 행사 그리고 해양전력투사를 위해 해군을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의 역할에는 억제, 전방시위, 위기대응, 전쟁이외의 해군작전, 해상수송, 연합작전, 전쟁에서의 해군작전 등이 포함된다.<sup>29)</sup>

먼저 한국해군은 억제의 측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군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여 미해군과의 연합 핵전략차원에서 핵억제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해군은 한·미연합 핵전략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생방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해군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억제 역할은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과 침략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발전시키고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해군은 비대칭전력을 활용한 북한해군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양시위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경비차원의 함정배치보다는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초기 위기대응을 할 수 있는 함정, 잠수함, 헬기 및 대잠초계기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전투집단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

27) 해군본부(2008), 전계서 및 해군본부「해군기본교리」(계룡: 해군본부, 1999), p. 2.

28) 김태우.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해군의 역할,” 제13회 함상토론회 논문집 (2009), pp. 3-5.

29) 해군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장승학(2009), 전계서, pp. 19-23 참조.

야 한다.

한국해군은 기본적으로 해양전략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구현하는 방향 즉, 북한위협에 대처하고 21세기 전략동맹체제로서 한·미양국의 국익에도 합치하며 더 나아가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력발전이 추진되어야만 한다.<sup>30)</sup> 첫째, 해군력의 발전은 육·해·공군 각 군의 합동성/연합성(Jointness)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 군사과학·기술에 의해서 지상·해상·공중 그리고 전자공간까지 모두 연결되면서 이제는 군이나 단일 병과의 힘만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해군도 공군, 지상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관 및 담당부서의 모든 작전요소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합동/연합작전만이 국방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전력을 제공한다.

해군력이 수행하는 임무는 종전까지의 해양통제뿐만 아니라 지상전역에 기여하는 “바다로부터 육지로 투사되는 군사력”(Power Projection from the Sea) 개념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상대방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타격함으로써 적의 핵심기능을 마비시키고 육상전투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지(對地), 대공(對空) 또는 대(對)지상전략 목표용 장거리 정밀 중심 타격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때 주변국의 잠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한국해군이 기동함대와 전략잠수함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전력증강이나 건설도 중요하지만, 한국해군은 현존전력의 선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2020에 의거 중·장기 전력증강을 추진함과 동시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존전력을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바탕으로 체계화 하는 것이다. 정보화 네트워크로 연결된 플랫폼의 전투능력은 무기의 화력이 아닌 “화력+정보능력”이라는 공식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잠수함, 유·무인 항공기, 함정, 무인잠수정 및 로봇, 각종 탐지장비, 감시 및 정찰자산 등 모든 플랫폼이 적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복합체제로 통합되어 자체 무기체계의 지휘·통제는 물론, 데이터링크를 통해 다른 플랫폼에 있는 무기체계의 실시간 조정·통제도 가능토록 만들어야 한다.<sup>31)</sup> 여기에는 해군과 해경이 유사시 하나의 함대처럼 작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0) 전과 동.

31) 정호섭, “한국의 해양전략과 전력발전방향,” 『Strategy 21』, 제21호(2008), pp. 265-267.

셋째, 한국해군력 발전에 있어서 잠수함 전력은 전략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잠수함은 상대방의 감시 및 정찰수단에 의해 쉽게 탐지되지 않고 은밀성을 유지한 가운데 오랫동안 해중에 대기하면서 획득된 정보에 따라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지상표적을 정밀공격할 수 있다. 또한 잠수함을 이용하여 특수전 요원을 적지에 은밀하게 투입시켜 중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잠수함은 언제 어디든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 잠수함이야말로 한국해군에게 있어서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무기체계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범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무인플랫폼 즉, 무인항공기(UAV), 무인수상함/정(USV), 무인잠수정(UUV)과 각종 로봇을 지금부터라도 적극 도입하여 전력화시켜야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예를 들어 지향성무기, 고에너지 전자파무기 및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개발도 한국해군이 전력발전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다섯째,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확보 및 교육·훈련이 해군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해군은 전문지식과 첨단기술로 구성된 군이므로 위성, 컴퓨터통신, 정보기술, 유도무기 등 군사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군장교들은 첨단기술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외국군 및 육·공군과의 연합/합동작전에 능통하고 지역정세에도 정통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해군의 전투력은 다양한 분야의 국방과학기술력과 정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분 및 활용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중심전(NCW)체계, 합동성과 연합성, 새로운 플랫폼과 무기체계 등 해군력 전반에 걸친 변화 및 발전이 실질적인 전투력의 향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군전투개념을 개발하고 이들 개념을 포괄적인 전투교리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미래해전이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여 새롭고 개량된 해군전투교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미래 해양전쟁의 양상은 장소 및 전력의 운용측면에서 국지제한전, 첨단기술전, 우주정보전, 미사일전 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 지휘통제, 신속기동성 및 정밀성 등 핵심적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융합할 수 있는 효과기반(Effects-based) 시스템 복합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sup>32)</sup> 따라서 한국해군의 군사력 건설방향은 무기체계, 인력, 장비, 기지 등 기반전력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요소(Hardware), 교리전략, 작전술, 전술, 지휘구조/부대편성, 교육훈련, 제도발전 등 운용적 요소(Software), 군의 사기, 기강, 인간적·정서적·환경적 요소를 총망라한 정신적 요소(Heartware)의 결합을 통해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3)</sup> 여기서 통괄적인 거버넌스(Governance)의 능력은 물리적, 운용적, 정신적 요소와 더불어 정책환경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적 요소(Policyware)와 설득 및 소통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요소(Smartware)를 포괄한다.

#### IV. 미래전 대비 전략해군의 역할 확대방안

국가안위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는 국가정체성 확립과 평화유지에 있다. 정부는 국가존립과 생존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란 힘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반만년을 이어온 도도한 역사에서도 증명된다. 마찬가지로 고대 아테네가 여러 세대에 걸쳐 꽃을 피웠던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민주주의는 강력한 해상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었다. 아테네 문명과 민주주의의 근간에는 강력한 해군력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테네의 해군이 없었다면 파르테논 신전, 소포클레스의 희곡, 플라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없었을 것이다.<sup>34)</sup> 해상제국의 파란만장한 흥망성쇠와 민주주의의 원동력을 “아테네 해군”에서 찾고 있다.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의 역할과 임무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적 사명으로서 세계 제5위의 해양강국과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양에서의 실제적

32) 길병욱, “한반도 평화변영정책과 국가안보,”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학술세미나 논문집(2004), pp. 1-25.

33) 김희상, 「21세기 한국의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서울: 도서출판 전광, 2003), pp. 41-74.

34) John R. Hale, *Lords of the Sea: The Epic Story of the Athenian Navy and the Birth of Democracy* (New York: Penguin Group, 2010), Ch. 1.



그리고 잠재적 위협을 억제 및 차단하고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해군의 임무는 실로 막중한 것이다. 첨단무기체계와 정보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통합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해양통제”를 통한 제해권을 확보하는 것이 방향이다.<sup>35)</sup>

실제적으로 해군의 역할과 임무는 전쟁억제,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군사력 투사,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 등이다.<sup>36)</sup> 현재 해양위협은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해양영유권 분쟁, 해양자원 확보에 따른 갈등, 반정부세력에 의한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전략해군 건설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선진강군의 전력체계 및 구조 확립, 예산 및 인적자원 확보, 선진해군문화 창달 등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sup>37)</sup>

## 1.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 해양보국 건설의 첩경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고 해양주권과 해양자원 보호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임무가 부여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sup>38)</sup> 선진국 어느 나라든 해양영토주권을 포기하거나 회피한 나라는 없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의 하와이 및 괌, 일본의 오키나와,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툴롱, 이탈리아의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 등도 대규모의 군항이 들어선 곳이다. 국가의 존망과 생존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독도의 국제영토분쟁 시도, 이어도 관할권 주장 그리고 국제적인 해양영토분쟁 사례 등을 보더라도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영토보존

35) 정관욱, “합동전구작전시 해군력 운용개념 발전방향 연구,” 「2008년 해군발전연구위원회 연구논문집」(계룡: 해군본부, 2008), pp. 69-82.

36) 해군본부(2008), 전계서, pp. 17-20.

37) 정책적 발전방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길병욱(2009), 전계서, pp. 4-17 참조.

38)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7년 제주도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해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 국회에서 소요 예산을 의결해 추진 중이다. 이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美港) 지원 등을 포함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법원에서는 기지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한 공유수면매립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처분 항소심에서 이 사업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府)가 모두 인정한 국책사업으로 정당성과 법적 효력을 갖추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안기석, “해양안보, 從北세력에 밀려선 안 된다,” 「문화일보」, 2012년 1월 19일 및 길병욱·박재필, 「제주해군기지의 효율적 사업추진 전략 연구」(계룡, 해군본부, 2011).

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대한민국 해군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영토를 보호하며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당위성과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의 사활적 이익인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필수불가결하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해외의존율이 97%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제주근해 해상교통로는 국가의 생명선이다. 수출입 물량의 99%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남방해역은 국가생존권 차원에서 상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

둘째,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해양영토분쟁에 대비하고 해양자원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독도 영유권/이어도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경계 획정 등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또한 해양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제주 서남방해역에 대한 안정적 관리와 분쟁해결 및 예방통제가 용이한 거점지역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남방해역이 석유와 천연가스 72억t 등 230여종의 해저자원이 매장된 지역으로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이 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보호해야 하고 이어도 부근에 해양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sup>39)</sup>

셋째, 제주해군기지는 해상전력 운용의 최적지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함은 물론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이후 동북아 주변국 대비 전력열세를 보완하고 즉각대응력이 갖춘 전략기지가 필수적인 것이다. 즉,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 해양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효과적인 해상전력 운용을 위한 최적지로서 국가적 사활이 걸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절체절명(絶體絶命)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소통의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 형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39) 이어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군기지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327km, 일본 사세보(佐世保)는 336km 떨어져 있지만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과는 480km 거리다. 부산에서 12노트(시속 22.22km)의 속력으로 이동하면 이어도까지 21시간 30분이나 소요돼 중국 상하이나 일본 사세보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7시간이나 많이 걸린다. 제주해군기지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면 제주와 이어도의 거리가 173km로 7시간 50분이면 함정이 도착할 수 있다. 길병욱, “평화의 섬 제주도를 지키려면,” 『세계일보』, 2011년 8월 21일.

미국의 하와이나 호주의 시드니와 같은 민군협력에 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의 건설이 아쉽다. 우리나라도 군항제가 열리는 진해와 같이 군과 지역평화가 서로 배치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관광명소가 있다. 환경생태계가 보존되고 국가안위 확립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민군 복합형의 관광미향으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었으면 한다. 만약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이 지연되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낭비와 추가적인 사업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적/행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훼손이 없이 정부와 제주지역주민의 화합과 협력에 의한 기지건설을 기대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관련하여 해군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형성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민적 이해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은 대통령 재가, 국회 예산심의 및 의결 등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고 제주도민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기존에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지건설 과정에서 환경 생태계 보존이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sup>40)</sup>

## 2. 전쟁억제력을 갖춘 전략해군의 전력체계 구축

전략해군이라 함은 방위충분성은 물론 전쟁억제력을 갖춘 해군의 군사력 투사능력 확보를 기본 전제로 한다.<sup>41)</sup> 따라서 한국해군은 해군비전에 명시된 바와

40) 갈등관리 프로세스란 정부가 공공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당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 및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김태룡 외,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해결절차의 제도화 연구」(서울: 사회통합위원회, 2010).

41) 방위충분성 확보의 근거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역사상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쟁이 약 1,000여회라고 한다면 바다로부터 외침은 약 400여회에 달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위충분성의 근거와 군사위협에 대비한 대응수준의 군사력 확보는 최소한 주변국 평균전력의 70%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억제수준의 군사력은 주변국의 평균전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해군이 일본·중국·대만의 동북아 3대 해군강국들에 대한 대응수준의 전력을 갖기 위해선 1,000톤급 이상 전투함 89척, 잠수함 18척, 해상보급함 4척, 해상초계기 52척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잠재적 위협국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같이 “연안이든, 대양에서든 생존,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와 전투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해군,” “세계 어디서든 작전수행이 가능한 해군”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억제하고 주변국의 해군력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군전력은 바로 첨단무기를 확보하여 보복적 억제력을 발휘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복합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략해군의 기본적인 전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적어도 3개의 기동전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상전투함 세력으로 전략적 억제 및 원해 기동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위충분성 전력규모를 3개의 이지스함(KDX-III) 기동전단으로 평가하고 있다.<sup>42)</sup> 1개 기동전단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 충무공이순신급 4척 등으로 구성되므로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의 확보가 요구된다. 상륙수송함(LPH)으로 대형상륙함 독도함은 첨단지휘통제시설을 탑재하고 있고 총 13기의 중형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원해에서도 입체작전이 가능하다. 3개 기동전단의 지휘통제함 기능과 상륙작전시 전력투사를 위해서 3척 이상의 독도급 LPH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잠수함 세력이다. 한국해군은 그동안 이지스함, 독도함 등을 바탕으로 대함, 대잠수함, 대공 작전능력을 향상시켜 왔고 북한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증진은 물론 확고한 방위태세를 견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해군은 또한 향후 9척이 건조되는 214급(1,800톤급, 척당 5,500억원) 잠수함과 차기잠수함 9척 등으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왔지만 해군의 3천t급 차기잠수함(KSS-Ⅲ) 개발사업이 1-2년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sup>43)</sup> 하지만 최근 언론은 2015년에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sup>44)</sup>

약 70여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잠수함 작전 능력은 태평양을 활동무대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잠수함 전력 증강과 더

전력이다. 최소전력 관련 보다 자세한 논의와 해군전력 건설방향에 대한 김현기 교수의 견해는 [Http://www.naver.com](http://www.naver.com)(검색일: 2009년 6월 17일) 및 장승학(2009), 전제서, pp. 64-65.

42) 전과 등.

43) 한국해군이 2018년부터 전력화하기로 했던 차기잠수함은 2년을 늦춰 2020년 1번함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2번함과 3번함을 전력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척당 1조원에 가까운 차기잠수함 모두 9척을 국내업체 주관으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하여 전력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007년 기본설계에 착수했으며 2009년 사업비는 25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최근에는 추진체계에 원자력을 사용하여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사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0년 10월 1일).

44) “잠수함 사령부 2015년께 창설, 올 예산에 배정,” 「중앙일보」, 2012년 2월 16일.

불어 효율적인 전력운용을 위해 “잠수함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 한국해군은 최소한 3,000-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확보하여 원해작전능력을 발전시키고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추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해군 잠수함은 장보고급 9척, 손원일급 9척 그리고 KSS-Ⅲ 소수를 포함하여 약 20여척의 세력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표 1〉 한국과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비교

구분	잠수함 전력	증강계획
한국	12척(디젤추진 방식) - 1,200t급 9척, 1,800t급 3척	2020년까지 3,500t급 중형 잠수함 3척 건조
중국	65척(핵추진잠수함 5척, 전략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3척 포함) - 최소 2,300t, 최대 1만 2,000t급 구성	2020년까지 8,000t급 핵추진 잠수함 5척 건조 러시아에서 킬로급 잠수함 12척 도입
일본	16척(디젤추진 방식) - 최소 2,750t, 최대 2,400t급 구성 - 첨단 성능 갖춘 최신에 함정	2015년까지 22척으로 증강
러시아	80여척(전략핵미사일 탑재 잠수함 15척 포함) - 최소 2,350t, 최대 2만 5,000t급 구성	다탄두 핵미사일 탑재 전략핵 잠수함 8척 2020년까지 건조

\*출처 : “잠수함 증강론 다시 수면 위로,” 『동아일보』, 2012년 1월 9일.

셋째, 항공 및 감시·정찰 전력 신속한 정보공유 및 정밀공격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링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향상된 대잠·대함능력과 다양한 정보·감시·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목적 해상초계기를 도입하여 총 30대 규모의 대잠초계기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sup>45)</sup> 또한 기동함대를 보존하고, 잠재적 위협 국가에 대한 강습작전 수행을 위해서 독도급 LPH에 8대의 수직 이·착륙기(AV-X)를 탑재하고, 향후 추가 확보가 요구되는 2척의 LPH에 필요한 16대도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센서를 탑재하여 ISR 임무수행은 물론, 통신체계 및 타격체계를 탑재하여 합동작전과 기동전단 원해 작전시 네트워크 중심의 동시·통합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대는 기동함대 창설시기와 맞추어 도입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한국해군에는 훈련함이 한 척도 없다.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청해

45) 장승학(2009), 전제서, pp. 64-65.

부대 파견, 연합군사훈련, 기동훈련 등의 작전에 투입되고 나면 교육훈련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적어도 2척이상의 KDX-1(광개토대왕급, 3,200톤) 훈련함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전쟁기획 및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약 8,000톤 규모의 탄약 수송함과 비이시스 전투체계 탑재함들과의 협동교전능력 향상을 위한 장거리 레이다, 스텔스 기능 등이 확보된 NCW 작전환경(NCOE, Network 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 조기구축이 필수적이다. 전략적 억제 및 거부능력을 갖춘 정보력, 수상전력, 수중전력 및 전천후 작전지원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유사시 합동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입체전력을 확보하는 첩경이다.

넷째, 해병대의 역할은 “상륙작전수행, 전략도서방어작전 수행,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수행, 필요시 지상작전” 수행이고 이런 역할을 위한 기본전투개념은 “입체고속기동전”이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구조는 공지기동 해병대이다.<sup>46)</sup> 따라서 이러한 다목적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단급 입체고속상륙작전 능력을 갖추도록 대형상륙함, 위그선(WIG), 고속상륙정(LSF-II), 차기상륙돌격장갑차(KAAAV) 등의 상륙전력을 포함해 전장가시화와 실시간 타격을 위한 감시수단, 공격헬기 등 원거리 타격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그 방향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창설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향후 도발위협을 체계적으로 감시·대응하고 도발원점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을 전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3. 한국형 시스템 복합체계 건설

시스템 복합체계를 갖춘 전략해군이 되기 위한 체계별 발전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sup>47)</sup> 첫째, 정밀타격체계이다. 정밀타격체계는 효과중심작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전력으로써 적의 국가핵심시설 및 주요 자산을 공격하여 적 지도부를 물리적·심리적으로 강하게 충격하여 전쟁의지와 방책을 단념시킨다. 해군이 한반도 영토 외곽에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바다로부터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46) 정기영, “해병대 60년 성장과 부침,” 해병대 발전전략 세미나 논문집(2009).

47) 장승화(2009), 전계서, pp. 57-65 및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서울: 평단문화사, 2005), 전계서, pp. 548-613.

타격할 수 있는 “공세적 정밀타격” 능력과 한반도 외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장거리 전략적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상공중방호 분야로서 ‘대공방어’를 위해서는 실시간 및 근실시간 정보의 원격공유, 전장 공간 확대, 정보감시체계와 타격체계가 연동되어 작동하는 “해양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sup>48)</sup>

공세적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자전 수행과 전자기 펄스탄 등 신 기술을 이용한 첨단무기 확보, 무인항공기 및 무인잠수정 등 무인장비들의 확대 운용, 초음속의 능력을 갖춘 사거리 연장탄 및 중· 장거리 고속미사일 개발 대응 능력의 향상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형 수송함에 수직 또는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중고도 및 고고도 무인항공기 확보,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150km이상의 함포공격이 가능한 사거리연장탄(ERGM) 및 전자기레일건(EMGM, Electro-magnetic Rail Gun) 확보, 수백 km이상의 중거리 고속미사일, 1,000km이상의 장거리고속미사일, 순항미사일 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과적인 대공방어를 위해서는 합동자산을 이용한 정보공유를 통한 합동추적능력(JTC, joint tracking capabilities)확보가 필요하다.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해군은 전구탄도미사일 방어에 적합한 ‘한국형 탄도탄추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해상 및 연안에서 적 항공 및 미사일 요격능력을 확대하는 합동추적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전장감시체계는 정보·감시·정찰 자산으로 구성되며, 적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조기경보에 의한 적의 기습을 거부하며, 표적정보 획득 및 작전 수행시 실시간 또는 근실시간 표적획득 및 효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전장감시는 전·평시 국가기구, 합참, 육군 및 공군이 요구하는 정보·감시·정찰자산 및 데이터를 지원하고, 동시에 이러한 자산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네트워크 기반구조를 구축하여 합동작전시 지속적, 우발적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장감시체계 발전방향은 센서기술, 정보·감시·정찰, 전장감시 네트워크, 정보수집체계 분야로 구분된다. 다양한 센서들은 영상, 신호, 수중 음향, 적외선 등의 물리적·전자적 현상을 탐지하고 다른 센서들과 통합적으로 운

48) 북한의 미사일 탐지 및 추적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에 탄도탄 요격용 SM-6(최대사정 400km) 미사일 또는 현무-3급 순항(Cruise) 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SM-6 미사일은 SM-3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하층방어에 국한돼 미사일방어(MD) 구축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의 주무장은 항공기 요격용 SM-2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대잠 어뢰뿐이다. 추가적으로 비대칭전력 건설 차원에서 함대지유도탄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종대왕함에 ‘주먹’을 달자.” 『동아일보』, 2012년 4월 24일.

용하여, 센서의 개별적인 능력을 하나의 감시체계에서 종합적으로 네트워크화 되도록 해야 한다.<sup>49)</sup>

정보·감시·정찰 분야는 해군의 작전목적에 부합된 네트워크 구조(Network Architecture)를 통해 기동성, 융통성, 공격성을 최상의 상태로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중요하다. 영상정보, 신호정보, 수중음향정보, 전자전 지원, 정찰위성 및 해양정보함을 이용한 수집체계의 고도화는 필수적이다.<sup>50)</sup> 예를 든다면, 영상정보 수집체계는 광학(optical), 전자광학(EO, Electro Optical) 및 적외선(IR, Infar-Red), 합성구경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등을 이용한 다양한 영상 정보수집 체계를 중첩 운용하여 각 체계의 취약점을 상호 보완하고, 실시간 영상 전송 및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처리기술로 각종 영상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근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한국형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및 육·해·공·합참의 통합정보시스템의 고도화가 포함된다.

셋째, 지휘통제체계는 효과중심작전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전력으로서 전장감시체계로부터 획득한 정보 및 전장인식을 공유하여 지휘속도의 증가와 자체 동기화를 통해서 통합적 전투력을 창출한다. 가장 효과적인 지휘통제체계 기능은 단순히 예하 제대에 대한 지휘 및 통제능력의 강화를 통한 주어진 전력의 산술적 통합이 아니라, 표적에 대한 정보획득 및 처리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평적·수직적 정보공유로 제대별 지휘관들이 자체 동기화함으로써 주어진 전력 이상의 전투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휘통제체계는 전장상황 인식, 전투기능, 데이터링크, 지휘통제 지원 분야에서 합동작전을 통한 다차원 동시통합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휘통제에 필요한 육상·해상·공중에서의 다차원 전장 공간정보를 실시간 및 근실시간 확보함으로써 적의 위협을 평가하고 합동작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투기능은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작전 운용개념 수립, 방책의 개발·비교·분석·평가, 명령의 예측전력의 분산, 합동작전 수행, 자동화된 표적편성 및 임무할당을 포함해야 한다. 복합체계는 지휘통제

49) 김학송, 「21세기 한국 해군력 발전방향」(서울: 국회, 2007), pp. 25-27.

50)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합동전장 감시체계 분야이다.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위상배열 레이더와 조기경보기 자산을 연동하여 24시간 한반도 전구에서의 적 항공기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 및 식별하고,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영토외곽 해양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시켜야 한다. 또한 합동작전시에는 적 중심의 핵심노드에 대한 정밀 타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승화(2009), 전계서, pp. 54-65.



를 지원하는 통신, 컴퓨터 그리고 지휘결심의 기본 자료가 되는 군사정보, 감시, 정찰, 표적획득, 타격을 위한 전투체계 등 지휘통제에 필요한 제 요소를 통합하여 완벽한 지휘통제 기능을 실현시켜야 한다.<sup>51)</sup>

시스템 복합체계는 지휘통제를 위해서 통신, 컴퓨터, 군사정보, 감시, 정찰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지휘결심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휘통제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장공간의 범위, 전력의 규모, 전투 환경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무수행별 최적의 복합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각 군별 독립적으로 발전된 지휘통제체계를 통합운영하여 합동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연합작전시 통합 지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지휘통제체계는 그동안 각 군이 개발한 체계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수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연합전력을 통합한 거시적 목표 하에서 통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첨단기술개발 및 군사혁신을 통한 해군전력 증강이 시스템 복합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최근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신개념기술시험(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연합개념기술시험(JCTD, Joint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등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호주 및 일본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중 가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선진국 대비 약 70-80%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4, 체계통합, 합동군 교리, 유지 및 통합군수지원 분야에서는 2015년경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사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방연구개발(R&D) 분야의 투자증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 전략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 4. 선진강군으로서 해군구조와 예산 및 인력확보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국해군에 비해 구조와 전력 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첨단 해군력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1,000해리 적극적 전수방위전략의 개념 하에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 신형 이지스함의 추가 건조(현 6척→8척)를 계획 중이고 헬기항모(13,500톤급) 4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잠수함

51) 김학송(2007), 전계서, pp. 29-32.

의 대형화(2,700톤→3,000톤급)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적극적 근해방위전략 개념 하에 원해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형 이지스구축함(6,500톤)의 추가 건조를 계획 중이고(6-7척), 항공모함(48,000톤급) 및 핵추진 잠수함(자체개발 4척, 신형 4척)의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sup>52)</sup> 러시아는 공세적 방어전략개념 하에 해군력 질적 개선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형 항공모함(58,000톤급) 1척과 보레이(Bolay)급 핵잠수함(17,000톤급) 3척 건조를 추진 중에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에는 첨단전력체계를 갖춘 해양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동북아 주변국들에 비해 한국해군은 기동성과 융통성 그리고 공격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고 한국해병과 함께 해군력은 Hard Power와 Soft Power를 겸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와 같은 현존하는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중·수상·항공·상륙 등 입체전력을 구비한 규모의 해군력 건설이 필요하다.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해군과 해병대의 구조적 전환은 필수적이다.

규모의 해군전력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와 유사한 물리적 환경과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스페인, 이탈리아), 분단국 경험과 군사통합사례를 갖고 있는 나라(독일), 우리와 유사한 지정학적 안보환경에 놓여있는 나라(이스라엘),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상대적 비교수준으로 고려해야 하는 나라(일본) 등의 군사력 수준과 전력배비를 비교대상으로 우리의 군사력 수준을 결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면에서 한국해군의 정적 군사력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최소한 15%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논리적 명분과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전의 특징과 동북아 전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육·해·공군의 연합전력을 유연하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군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획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은 육·해·공군의 균형전력, 총력 방위태세 적응능력, 장차전 적응 기술화 전력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사력이

52)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항모 1호는 6만5천t급으로 영국이 건조 중인 엘리자베스호, 러시아의 쿠즈네초프호에 맞먹는 중형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러시아 항모 쿠즈네초프호에 비쳐 볼 때 중국 항모 1호는 갑판의 길이가 300m를 넘어 쑤(蘇)-33, 젠(殲)-10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잠수함 공격이나 공중 방어 등 강력한 전투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항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이 이미 창싱다오 항모 건조시설에 350억위안(약 6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검색일: 2010년 9월 1일) 및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London: IISS, 2009) 참조.

되어야 한다. 특히 육·해·공군의 균형전력의 측면에서 한국군의 전력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동맹 군사력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군사력 구조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군사력 구조개선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군 내외적으로 비교의 관점(perspectives of comparison)과 발전에 대한 지평(horizon for development) 그리고 상호협력적인 지혜(reciprocal wisdom)를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sup>53)</sup>

또한 적정 규모의 국방비 확보는 국방개혁 성공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문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가 경제성장률의 둔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국방개혁 2020에 필요한 예산 621조원은 계획당시에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경제여건과 실현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재원을 3단계로 구분하여 국방비 인상률과 국방예산을 차등화하여 책정하였다. 예를 들면, 1단계(2006~2010년)에서는 연간 국방비 인상률 9.9%를 고려한 139조원, 2단계(2011~2015년)는 국방비 인상률 7.8%를 고려한 216조원, 3단계(2016~2020년)는 국방비 인상률 1.0%를 고려하여 266조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2006~2007년 편성된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개혁안보다 약 6,350억원이 부족하게 책정되었다.<sup>54)</sup>

따라서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방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의 창의적인 해군력 건설이 요구된다. 그동안 국방예산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어 대양해군력과 다목적 신속대응군 건설을 위한 계획들이 보류되거나 조정되어 왔다.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획득비용의 증가 그리고 장비의 운영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관계로 제한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전체적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621조원에서 22조원 정도가 축소될 전망이고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해군에게 필요한 국방예산은 약 70조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정된 부분에 맞추어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가용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은 2011년 약 31조 2천억원, 2012년 약 32조 95백억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이는 1990년의 국가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인 24.2%,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와 비교하여 2012년의 경우 10.1%와 2.6%로 상당히 떨어진 수치이다.<sup>55)</sup> 안보위협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은 GDP 대비 6.9%를 국방비로

53) 최병학, “조직행태의 목표-상황적 고찰: 인간과 조직의 비교적 관점,” 『공군평론』, 제63호 (1984), p. 70.

54) 김학송(2007), 전제서, pp. 42-43.

투자하고 있고 위협수준이 현저히 낮은 싱가포르도 GDP 대비 4.3%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sup>56)</sup> 특히 국방비 대비 전력투자비의 각 군별 배분현황을 보면 해군의 경우 2003년 22.2%, 2007년 24.9%, 2010년 23.8%로 제일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국방효율화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 취약점 보완, 방위력 개선소요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배분, 통합군수지원의 확대, 인적자원 육성 및 경상비 운영의 획기적 개선,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sup>57)</sup>

〈표 2〉 국방비 대비 전력투자비의 각군별 배분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방비	계	17조 5,148억	18조 9,412억	21조 1,026억	22조 5,129억	24조 4,972억	26조 6,490억	28조 5,326억	29조 5,627억
	전력 투자비	5조 7,397억	6조 2,930억	7조 2,987억	5조 8,077억	6조 6,807억	7조 6,813억	8조 6,147억	9조 1,030억
	점유율 (%)	32.8	33.2	34.6	25.8	27.3	28.8	29.1	30.8
군별 점유율 (%)	육군	34.0	32.4	31.9	29.3	31.7	32.1	32.0	32.1
	해군	22.2	20.8	22.4	25.0	24.9	25.0	23.3	23.8
	공군	25.1	24.4	26.0	26.3	26.8	26.7	29.5	27.4
	공통	18.7	22.4	19.7	19.4	16.6	16.2	15.2	16.7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0), p. 317 및 박재필, “한국 군사력 건설의 주요 결정요인 및 논쟁·대립구조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군사학박사논문, 2011, p. 112 및 p. 121.

향후 한국해군은 변화하는 국방여건 속에서 실행이 가능한 단계적 전력발전을 추진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 국방연구개발(R&D) 분야의 지속육성과 더불어 사회발전 추세와 장병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배분에도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

55) 김성만, “국방비 적정인가?” KONASnet(Korean National Security Net), <http://www.konas.net> (검색일: 2012년 5월 31일).

56) 전과 동.

57) 박주현, “군 요구수준 국방비는 국민의 이해 우선 되어야,” 「국방저널」, 통권 제442호(2010), pp. 19-22.

고 국방비 배분의 대립구조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의 국방재원으로는 전력체계를 완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sup>58)</sup> 하지만 국방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투자를 통해 연합성·통합성·동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예 첨단전력을 갖추어 해양주권을 사수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강한 대양해군을 건설해야 한다. 재원확보를 위한 국민적 설득과 이해 그리고 3군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명한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감대 증진차원에서 “해군가족”이라는 협력적 통합체를 구축하여 네트워크화하고 상생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획득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맞춤형의 인재획득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 획득 및 운영체계 개선,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여성인력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제도 등을 마련하고 체계있는 전문인력을 육성관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해군 또한 기술집약형 첨단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고의 전투전문가 육성과 지식정보화시대에 변화와 도전을 주도하는 전문인재의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sup>59)</sup> 하지만 해군의 경우 국방부, 해군본부 등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장교의 비율이 육군 및 공군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미래해군을 이끌어갈 전문화된 핵심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2020-2025년부터는 병력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관계로 군의 직업주의 보장,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획득 및 인사관리에 있어서 영관장교 출신구성 다원화, 여군 및 군무원 확대 등의 인력획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5. 전략적 해양동맹·협력체제 및 “해군가족”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향후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 주도, 미국군 지원” 체계

58) 군사력 건설의 대립구조는 북한 위협 對 미래 잠재적 위협, 한·미동맹 對 자주국방, 전면적 국방개혁 對 점진적 국방개혁, 통합군 對 합동군, 국방예산 對 국가경제·복지 예산, 방위산업 국산화 對 소요 무기·장비 전력화 우선 등이 있다. 박재필, “한국 군사력 건설의 주요 결정요인 및 논쟁·대립구조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군사학박사논문, 2011.

59) 해군본부(2008), 전계서, pp. 27-31.

가 정립되는 방향으로 군의 전력체계 확립 및 군구조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한국해군은 국방개혁을 통해서 대북위협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다기능의 탄력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력을 건설하고 미군의 전략적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전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전작권 이양 이후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첨단전력 위주의 기동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군은 한미연합전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다차원적인 군사협력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독자적인 전쟁기획 및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복합체계의 구축과 전쟁역제력이 확보된 해군전력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군에게 중요한 군사적 능력을 제공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미군이 배치한 항공모함, 이지스함, 핵잠수함, 조기경보기 등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사용함은 물론, 중국이 바다를 통하여 군사적 팽창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거부하는 전략적 억제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략적 해양동맹·협력체제 구축하고 동맹의 다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다변적 또는 다자적 해양협력은 구조, 인적자원 및 국제기구상의 협력방안을 포괄한다.<sup>60)</sup> 여기에는 호주와의 전략동맹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국제해양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중위권 해양세력으로 한국과 호주는 해양분쟁해결, 환경 및 인권보호, 테러 및 약탈방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국제협력안보를 주도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해군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훈련장 및 연습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외연능력의 확대와 더불어 한국해군이 추구해야 될 부분은 내적인 안보공동체 형성과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민군 간의 상시적인 상생협력체제로서 “해군가족”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해군전력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지원이다. 그동안 해군발전 위한 정책의 주체(例; 해군) 및 객체(例;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여론주도층 등)들 사이의 유기적인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이 미비하여 해군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정책적 갈등양상이 표출된 적이 있다는 비평이다. 과제는 해군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강화차원의 “해군가족 통합적 정책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

60) 김경식, “동·서 해양신뢰구축 경험과 한반도 해양신뢰구축 방안,” 「해양전략」, 제77호(1992), pp. 20-69.

먼저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국해군의 전략적 목표인 대양해군으로의 도약방향에 대한 기본구상을 설정하고 전국 차원의 해군 유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연결망 구축을 통한 해군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 관련 서포터즈(Supporters)를 결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군 관련 국가안보정책을 수립, 대안분석, 집행, 환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의 주체 및 객체가 참여하여 해군력을 발휘하는 대안으로서 해군, 해군가족, 시민·사회단체,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을 포괄하는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합·연계한 “정책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 구축을 의미한다.

내외부적으로 해군조직, 해군세계를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조직·사회라는 “연계구조”(Linkage Structure)를 바탕으로 공공의 관리, 경영, 정책네트워크를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해군가족의 삶과 목적 그리고 보람과 가치를 고양하는 모멘텀으로 승화하는 것이 방향이다. 궁극적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해군의 위상제고 및 역할증대를 위한 지지·후원·협력기반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해군발전을 기점으로 민·군·관·정·산·학·연·언(民·軍·官·政·産·學·研·言) 총체적 차원의 다이나믹 거버넌스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을 제기한다. 거버넌스 체제의 복잡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그리고 참여를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갈등관리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갈등관리센터와 해군가족 또는 서포터즈 포럼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포럼을 통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sup>61)</sup>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제평화를 위한 기지이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다. 일본과 중국은 최근 급격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군력 증강 상황은 우리에게 심대한 안보위협이 되는 것이다. 해군가족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주변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해양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모두가 하나 되는 해군문화 창달, 해군 전 부대간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 해군의 소속감 및

61) 강조하자면, 제주 남방해로는 대한민국의 핏방울과 같은 석유수송로이다. 국가안보를 진정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만으로부터,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지나해, 제주해협에 이르는 온 항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하와이는 세계적인 해군기지가 있는 섬이며 오키나와, 괌섬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지만 이 섬들은 모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평화의 섬 제주도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진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다. 이춘근, “제주도 해군기지와 한국의 해양전략,” 한국해로연구회 주관 제주해군기지면제 정책토론회 논문집(2007), pp. 5-9.

자긍심 고취 등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 갖기 운동은 하나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해군의 역사와 전통과 함께 이어 내려온 민군 협력과 대민봉사는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향후과제

한국해군은 평시에는 거부적 억제전략을 통해 국가주권과 해양권을 보호하고 전시에는 공세적 마비전략을 수행하여 전승을 보장해야 한다. 전략해군이 지향하는 바는 모든 유형의 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절대 우위의 정보와 기동(Information Supremacy and Dominant Maneuver), 정밀타격 및 교전(Precision Strike and Engagement), 전차원 방호(Full Dimensional Protection), 적시·적소·적량의 초점화 군수(Focused Logistics)가 시스템 복합체계로 통합되어 전 분야에서 군사적 우위와 공세적 마비를 달성하여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다.<sup>62)</sup> 이 과정에서 한국형 시스템 복합체계 건설, 억제력을 갖춘 해군전력체계 및 기지건설, 선진강군으로서 규모와 예산 및 인력확보, 전략적 해양동맹·협력체제 및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다.

강조하자면, 전략해군으로서 한국해군의 임무는 전쟁억제,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군사력 투사, 국가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선양 등이다.<sup>63)</sup> 어떤 상황이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가 곧 해군력 건설의 방향이다. 투철한 사명감과 위국헌신의 정신은 그 동안의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이미 표출된 바 있다.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한국해군은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과 국방경영의 마인드로 첨단입체전력을 건설해야 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활개치며 일 잘하는 해군이 되어야 하며 실용과 화합의 해군문화를 창달해야 할 것이다.

한국해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현존 및 잠재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해군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규모화, 범위화 및 고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서

62) Norman Friedman, *Seapower as Strategy: Navies and National Interests*, Washington, DC: US Naval Institute Press, 2001 and *Network-Centric Warfare: How Navies Learned to Fight Smarter Through Three World Wars*, Washington, DC: US Naval Institute Press, 2009.

63) 해군본부(2008), 전계서, pp. 17-19.



언급한 바와 같이, 해군의 규모화는 곧 해군력의 적정 규모화(Optimum Size)를 의미하고 이는 전략적 전장상황 하에서 최적의 전력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 규모를 뜻한다. 또한 해군의 범위화는 해군력의 적정 범위화(Optimum Range)로서 최적 해양방어, 거부 및 통제 그리고 전력투사 범위를 포괄한다. 더불어 선진정예해군은 전략해군으로서 최적의 효율성과 효과를 이룩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의 고도화(High Quality)를 요구한다.

따라서 연안이든, 대양에서든 생존,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와 전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국해군은 전략적 억제 및 원해 기동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개의 이지스함 기동전단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잠수함 세력확보를 위해 한국해군은 장보고급 9척, 손원일급 9척 그리고 KSS-Ⅲ 등을 포함하여 약 2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항공 및 감시·정찰 전력 신속한 정보공유 및 정밀공격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링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향상된 대잠·대함능력과 다양한 정보·감시·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목적 해상초계기를 도입하여 총 30대 규모의 대잠초계기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2척이상의 KDX-1(광개토태왕급, 3,200톤) 훈련함과 약 8,000톤 규모의 탄약수송함 확보도 필수적이다. 미래 해병대는 상륙작전수행, 전략도서방어작전 수행,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수행, 필요시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해군은 기본적으로 해양전략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구현하는 방향 즉, 북한위협에 대처하고 21세기 전략동맹체제로서 한·미양국의 국익에도 합치하며 더 나아가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력발진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해군의 기여는 지대하다. 평화유지군활동(PKO)을 포함한 민사작전 수행, 인도적 지원 및 해외구호활동,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참여를 통한 해상통제, 공해상에서의 해적 및 약탈행위 근절 등이 그 사례이다. 해외 군사활동에 참여하고 재난구호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유사시 해외 거주 자국민의 안전귀환을 위해서는 원거리 전력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의 표상이다. 우리 해군은 해상왕 장보고와 충무공 이순신에 이어 손원일 제독의 해양보국 정신을 이어받아 도도한 역사의 부름에 온몸을 던져 불철주야 헌신해 왔다.<sup>64)</sup> 군에 몸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군을 떠난 후에

64) 오진근, “손원일, 선견지명(先見之明)의 리더십,” 『해군』, 통권 제398호(2009), pp. 38-42.

도 손원일 제독이 평생을 통해 제시한 선견지명(先見之明)의 리더십(즉, 신념과 집념의 리더십, 실력과 능력의 리더십, 신사도의 리더십, 열정과 솔선수범의 리더십, 선견지명의 리더십, 인재중시와 사랑의 리더십)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또한 이 시대의 젊은 장병과 후세들이 그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해군문화를 계승·발전시킬 것이 분명하다.

Abstract

## Extending Plans of the Role of ROK Navy vis-à-vis the Expansion of Maritime Security Threats

Kil Byung-ok \*

Northeast Asia has a multi-layered security structure within which major economic and military powers both confront one another and cooperate at the same time. Major regional powers maintain mutually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economic sphere while competing one another in order to secure a dominant position in the politico-military arena.

The multifarious threats, pos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erritorial disputes, and maritime demarcation line issues demonstrate that Northeast Asia suffers more from military conflicts and strifes tha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Specifically, major maritime security threats include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and missile launching problems as well as military provocations nearby the Northern Limit Line(NLL) as witnessed in the Cheonan naval ship and Yeonpyong incidents.

The ROK Navy has been supplementing its firm military readiness posture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threats on the NLL. It has performed superb roles in defending the nation and establishing the Navy advanced and best picked. It also has been conducive to defend the nation from external military threats and invasion, secure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s, and establish regional stability and world peace.

---

\*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future warfares, the ROK Navy needs to shift its military structure to one that is more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tensive. In addition, it should consolidate the ROK-US alliance and extend military cooperative measur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Evolved steadily for the last 60 years, the ROK-US alliance format has contributed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conclusion, this manuscript contends that the ROK Navy should striv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1)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2) Strategic Navy Equipped with War Deterrence Capabilities; (3) Korean-type of System of Systems; (4) Structure, Budget and Human Resources of the Naval Forces Similar to the Advanced Countries; and (5) Strategic Maritime Alliance and Alignment System as well as Domestic Governance Network for the Naval Families.

Key Words: Northeast Asian Security Structure, Maritime Security Threats, ROK-US Alliance, Strategic ROK Navy, Northern Limit Line